

시·도당위장-현직단체장 사퇴 시한 형평 논란

민주, 당헌·당규 개정 출발부터 삐걱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 연말까지 결정될지 미지수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형평성 논란과 각종 이견이 속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등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당내외의 치열한 신경전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민주당은 제12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공정한 공천심사와 경선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시도당 사무처장 등의 사퇴 시한 규정 등을 상정했으나 각종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주에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문제가 된 것은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 문제. 민주당은 지난 18

일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시도당위원장은 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하는 규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상당수의 당무위원들이 현직 단체장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들이 막대한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나서는 시도당위원장을만 선거일 6개월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단체장 경선을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주도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경선 시비 가능성도 낮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시도당 위원장이 꼭 사

퇴해야 한다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이 아닌 3개월 전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 시도당위원장이 기득권 확보를 위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반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한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영남 등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정하지 않

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모 인사는 "현역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패해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시도당 위원장 사퇴 시한과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지역위원장 사퇴 문제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이 많았다"며 "내주 논의에 앞서 당헌 당규를 다시 고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에서는 12월까지 외부 인사 영입 활동을 마치고 내년 1월 뉴민주당 선인과 함께 대규모의 입당식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민생법안은 회기내 처리키로

원내대표회담 ... 4대강 총돌 여전

여야는 19일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의 중이었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혁법안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키로 하고 민생 및 정점 법안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합의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양당은 그러나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 자료

와 세종시 수정,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으로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또 국회 내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특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4대강 예산자료 부실 논란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현 자료로는 예산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에 안 원내대표는 심의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만 추후 더 논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안 원내대표가 연말까지 정부안이 나오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논의에 대해 당장 중단하고 원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당은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 '격노'

부산 화재참사 농장 보고 日 총리로부터 듣고 알아

정운찬 국무총리의 현장방문과 유족사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과성명, 강희라 경찰청장의 현장지휘...

19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언론조차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산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 태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격노가 자리하고 있다. 부산화재 사고 당일인 14일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이었으며, 이 대통령이 부산화재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에게서다.

먼저 사고소식을 보고받은 하토야마 총리는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인 관광객 피해를 언급하며 사고수습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때까지 이 대통령은 부산화재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담당 후 관계자들에게 '격노'했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리안 관계자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 총리에게 국내 소식을 먼저 들었던 당시 상황을 추론해 보면 정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 인사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안부, 문화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이 나서 범정부적인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격노가 있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계란 세례 받은 '세종시 특위'

현장 방문서 ... 지역여론 청취 못하고 떠나

본격적인 여론수렴을 위해 19일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한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회가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의화 위원장을 비롯해 이사철 백성운 전여욱 허천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버스 편으로 서울에서 출발해 오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 도착했다.

이들이 탑승한 버스가 나타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800여명의 시위대가 버스에 계란 20여개를 던졌다. 경찰 2천여명이 버스 통로를 확보하고 시위대를 막아 물리쳐 충돌은 없었으나 시위대는 2시간 후 특위 위원들을 태운 버스가 현장을 떠날 때 도다시 계란을 투척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 위원들은 정진철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건설 진행상황 및 업무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인구유입 계획과 자족기능 보장 방안 등에 대한 질

의가 쏟아졌다.

특위는 보고청취 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론을 청취하고 건설현장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보고만 들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특위는 이날 현장방문에 이어 지역별, 전문가별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대안이 제출된 뒤 당내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미리 '세종시 민심참고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해당 지역인 충청지역을 직접 방문, 지역 여론주도층의 의견을 구하는 동시에 영남, 호남,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찾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종시 입안 당시 국제공모전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도 접촉, '세종시 원안'을 살펴보고 중립적 입장에 있는 각계 인사 등과도 만나 세종시 관련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의회 예산안 '보이콧' 후폭풍

사전 설명 안한 간부 징계 요구

전남도의회가 예산안 사전 미 협의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전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안 파문'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도의회가 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감경' 방침을 고수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간담회를 하고 향후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예산안 사전 설명 등을 하지 않은 집행부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예산담당관을 인사조치할 것을 박준영 전남도지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의장단과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예산안 본회의 상정 등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 표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의원들은 내년 예산안이 본회의에 제때 상정되지 못한 것은 기획조정실의 안이한 태도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홍이식(화순)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관리실의 업무 중 예산보다 중요한 일이 있느냐?"라며 "의회 움직임이나 동향과약도 안 되고 예산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영철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했고 의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의정님께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반영 내용이 나오지 않아 협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오늘 광주시 청렴 특강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광주에 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청렴교육연구시립학교인 양산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오후 2시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청렴도 향상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www.hanbitgosi.co.kr

2010년 공무원정원 4600명 증원 국가직 9명 공무원시험 4월 10일 신바람 나는 공무원 합격준비는 지금부터 한빛에서

you can ~

9종합반 6개월
금요일반 **회원제 모집**
(교재 포함 100만원)
1개월 수강료 20만원, 교재값 189,000원

정규수업외 회원의 특전 =

1. 기초 무료특강 (전과목)
2. 전국 모의고사, 자체 모의고사
3. 동영상 무료제공
4. 책임 담임제 관리

동원 (12월) 수강인원 11월 18일 ~ 30일 까지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한빛고시학원

전국 유일 7급 공무원 짜수바 차지도 9급 이턴 7급인 신인도

(12월 ~ 1월) 2개월 완성반! 아무도 믿지 말고 한빛만 따르라!!

79 종합반 개설 강좌 행정직 / 세무직 / 권선직 / 법원직 / 소방직 / 경찰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기술직 / 고령직 / 브도직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올야간반

개강 12.1 종합/당과반 (안양을 찾긴드!)
첫개강 12.1 =강의시간= 19:30~22:50

한빛고시의 합격시스템
장국립의 강사진, 최고의 사명에서 탄생은 수강생들 관리가 있습니다.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

자재학원 > 김영민학원(광주 중부경찰서 뒤 062-227-8088), 한빛경찰학원(북구청 앞 062-262-3553)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8,000명 증원예정

소방직 전문학원

국립유원 시험장급 통합 소방특목경기 도립 소방체력측정기 무료체험

가장경제적인 수강료 + 교재 5원 무료

6개월 합격학원 90만원

이론강의 + 문제풀이 + 동영상 무료제공 + 체력측정

한빛소방직전문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262-0252